

산업맥박

10대 핵심전략 부품·소재 선정

우리나라 차세대 10대 전략 부품·소재 품목 중 하나로 LCD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 투명탄소나노튜브(CNT) 복합소재 등이 선정됐다.

기업체와 산업자원부는 10대 전략 부품·소재에 향후 5년간 총 1조 5,000억원(정부지원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가치 20조원을 이룩하고 2008년 이후 이 산업에서 연간 36만여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0대 전략 부품·소재

10대 전략 부품·소재는 파급효과가 큰 3대 업종(전기·전자/자동차/기계)에서 선정됐다. 전기·전자 분야 5개, 자동차 3개, 기계 2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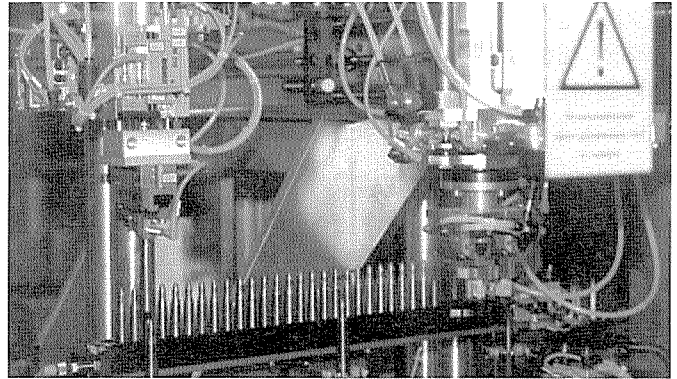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LCD부품, 투명 CNT복합소재, RF 임베디드 기판, 근거리 무선통신복합모듈, OLED 재료 등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LCD부품으로는 색 대비비를 개선할 수 있는 픽셀디밍 구동 면광원, 환경규제에서 자유로운 무수은 램프,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휘도향상필름 등이 포함돼 있다.

가벼우면서도 강하고 정전기를 없애 차세대 케이스 소재로 각광받는 투명CNT복합소재에서는 컬러 전자파 차폐기능 외장재, 고강도 경량 외장재, 정전분산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됐다.

기판에 저항 등 수동부품을 심어 활용면적을 확대하는 RF 임베디드 기판 과제로는 수동형 부품 탑재 기판 재료와 기판, 각인 기술 적용 기판이 포함된다. 지그비·RFID·UWB·WLAN 등 다양한 무선표준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복합모듈에서는 복합 모듈용 안테나, 다중 FEM 등이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에는 수용성 인광재료 및 잉크, 투명 흡습제, 감광성 유기막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기업체는 2008년까지 전기·전자 분야에 1조 1,000억원, 자동차에 1,800억원, 기계 분야에 1,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과제 개발이 마무리되는 2008년에 LCD부품(5조원), 투명 CNT복합소재(15조원), RF임베디드 기판(9조 5,000억원), 근거리 무선통신복합모듈(15조원), OLED 재료(4,000억원) 등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협력해야 성공

이승훈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이번 선정 품목은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꼭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이전과



전기·전자 분야 핵심 전략 부품·소재

선정 품목	만위 부품 소재	시장규모
LCD부품	픽셀 디밍 구동 유닛 편광원, 무수은 방전 램프 및 발광 구동 분배기, 터치스크린패널, 러빙포, 기능성 모듈용 커넥터, 휘도 향상필름&플레이트, 광학산필름&플레이트, 렌티콜라필름&플레이트	5조원
투명 탄소나노튜브(CNT) 복합소재	컬러 전자파 차폐기능 외장재, 고강도 경량 외장재, 정전분산(ESD)플라스틱	15조원
RF 임베디드 기판	임베디드 수동 부품용 하이 Dk재료, 임베디드 수동부품 적용 차세대기판, RF임베디드 테스트베드 구축, 임프린트 기판 개발	9조 5,000억원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모듈	근거리 무선통신 복합 모듈용 안테나, WPAN용 멀티 MAC, 근거리 무선통신 멀티 FEM	150조원
OLED	OLED용 수용성 인광재료 및 잉크, 게터(흡습제), 감광성 유기막	4,000억원

*시장규모는 2008년 예상치

달리 정부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수요·투자·개발 주체인 전경련 주관하에 이루어져 사업체들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0대 전략 품목의 개발 주체는 중핵기업이다. 전체 개발(모듈화)은 중핵기업이 하되 세부 부품은 중소 및 벤처기업이 담당하고 대기업은 기술을 제공하면서 향후 사업화시 구매하는 역할을 맡게돼 대·중소기업 모두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산자부 측은 밝혔다. 10대 전략품목마다 4~5개의 개별 과제가 있고 개별 과제별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만큼 총 40~50개의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10대 전략 부품·소재 선정 과정이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이 주관해 개발 주체인 중핵기업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일부 품목은 대기업이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기업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발하더라도 구매는 각 기업의 고유 권한이자 전략”이라며 구매 확약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